무안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전문가 참여 '無'

김문수 '12·29 참사' 공항공사 자료 확인
최근 2년 3차례…민간협 점검 필요성도
정준호 "여객기 둔덕 충돌 시속 232㎞"

무안공항이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2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파악한 결과,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18일과 2024년 7월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19일 등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회의의 전문가 참석 여부에는 모두 'X'가 기재됐다.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도 2023년·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다. 대구공항의 2023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4년에는 민간협회에서 참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 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켰다.

이와 관련,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민간협회 소속 인사가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생태·위험 분석 전문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4개 공항 가운데 3개 공항은 군이 주관해 조류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5개 공항은 지역 민간협회 소속 인사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 차원에서도 공유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8차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고 APEC 기간 중 주요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항별 조류 전문가 배치와 예방인력 대상 전문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문수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위험평가 결과에서 실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창오리와 같은 대규모 군집 이동 조류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평가 과정이 조류생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뤄진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항공기 충돌 가속도' 분석자료 결과를 공개했다.

항철위 자료에 의하면 사고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지점 374km/h ▲활주로 마찰시작 지점 374km/h ▲충돌 지점 232km/h로 분석됐다.

항철위는 충돌 당시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를 최소 20G 이상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면의 유효 질량과 기체의 질량 비율을 0.5 이상으로 가정했고, 충돌 지속 시간을 최대 0.1초로 적용한 결과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면서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계약업무 소홀 배임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장흥군수 상대 취소 청구 기각

계약 업무 소홀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근무하며 장흥 물 축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장흥군은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각각 2동을 구매하기로 했으나, A씨는 이 대신 무방류 화장실 4대를 관급 자재 구입 의뢰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무방류 화장실 4대의 가격으로 4억여원을 업체에 지급했으나, 실제론 이동식 화장실·샤워장 각각 2동을 받았다.

문제는 이동식 화장실·샤워장이 무방류 시스템이 갖춰진 것보다 대당 3천만원 정도 저렴했고, A씨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불거졌다.

이 같은 행위로 A씨는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00만원을 확정받았고 장흥군으로부터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해임됐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납품 업체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이동식과 무방류 화장실의 차이를 몰라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동식과 무방류의 차이는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고 정상 납품 확인 없이 검수 확인서를 기재했다는 대목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또 지방공무원법상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도하진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

옥상 간판 안전점검 12일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과 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이 풍향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강풍으로 인한 간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 강풍에 떨어진 간판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김애리 기자

"GGM 사측 부당노동행위 市 책임있는 중재 나서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한 가운데 노동계가 광주시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GGM 최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 지회장을 비롯해 지역 금속노조 간부, 노사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해 7월 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파업으로 인해 채권단의 대출 조기상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한 경영설명회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8월 진행된 합법적인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 방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또한 같은 시기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조치와 쟁의행위 과정에서 부착된 노조 선전물 훼손 행위 역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 측은 "겉으로는 노사상생을 내세우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노조 배제와 부당노동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광주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실질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GGM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정이 회사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윤찬웅 기자

화순군의원 5명 '불법 기부행위' 재판대에

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 관련

화순에 건립된 고(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와 관련, 불법 기부행위를 한 화순군의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에 따르면 현직 화순군의원 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A씨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화순 지역 원로 정치인인 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한 돈을 내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추모비 뒤에 새겨진 기부자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추모비 명단에 포함된 구복규 화순군수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며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구 군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광주 두암동 일대 상습 차량 털이 40대 구속

광주 두암동 일대에서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 절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됐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2시께 북구 두암동 일대에서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현금 중 약 45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500만원은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서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가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윤찬웅 기자